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습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헌법

1.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나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해외 이주, 국적 이탈 및 무국적의 자유를 포함한다.
- ②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로 인해 대상자가 주소, 실거주지, 직장 등의 소재지 변경 사항을 제출 및 등록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수용이 헌법 제23조제3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원칙에 부합하는 이상, 그러한 수용만으로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복무중인 장교의 평시 외출·외박을 2시간 내 복귀가능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외국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헌법상 직장 선택의 자유는 그 성격상 ‘인간의 자유’라기보다는 ‘국민의 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외국인인 청구인에게는 직장 선택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외국인인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외국거주 외국인 유족’이면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혹은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달리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④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1회 납만으로도 별도의 공단 처분 없이 곧바로 그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그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외국인인 청구인들을 내국인 등에 비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⑤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의 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거나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형사재판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후 해당 처벌 근거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룰 수 있다.

ㄴ. 설령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적어도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ㄷ.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이라도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소급효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ㄹ.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4.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 ② 형사보상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만, 형사보상청구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사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무죄판결이 확정된 군사재판의 피고인에 대하여 6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피고인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군사법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 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 보 기 >
- ㄱ. 「국가공무원법」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한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 ㄴ. 「교육공무원법」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더라도,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 ㄷ. 「법원조직법」이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장·대법관과 달리 판사의 경우에는 그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없고, 가사 판사가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의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심급제도를 통해 상급심 재판으로 해소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장·대법관과 달리 ‘판사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ㄹ. 「국가공무원법」이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에 대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는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으로서 기대되는 최소한의 직무수행능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ㅁ. 「국가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한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는 그 자체로는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들과 그 비난가능성이나 위험성의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ㄱ	ㄴ	ㄷ	ㄹ	ㅁ
①	O	O	O	O	O
②	O	O	X	O	X
③	X	X	O	X	O
④	X	O	X	X	O
⑤	X	X	X	X	X

6. 헌법상 탄핵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ㄱ.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해당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도록 유추해석하거나, 「헌법재판소법」 제54조제2항에서 정한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에 대한 공직 취임 제한’을 ‘임기만료로 퇴직한 사람에게 파면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도록 유추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어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다.
 - ㄴ. 헌법 제65조제1항의 ‘직무집행’은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되나,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ㄷ.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
 - ㄹ. 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ㅁ. 탄핵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며, 피청구인의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ㄷ, ㅁ
- ③ ㄱ, ㄴ, ㄹ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ㅁ

7.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인 비약사의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규율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ㄷ.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 법무부장관이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공고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자가격리자에 대해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 사전신청기간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ㅁ. 개정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들의 경우, 등록말소조항에 의해 임대유기기간이 종료되면 그 등록이 말소되고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더 이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임대사업자의 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

	ㄱ	ㄴ	ㄷ	ㄹ	ㅁ
①	O	O	O	X	O
②	X	O	X	X	O
③	X	X	O	O	O
④	X	O	X	O	X
⑤	O	X	O	O	X

8.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법목적과 그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며,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준비속이라는 신분관계는 범죄의 죄질과 책임의 측면에서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만 기능할 수 있고 국가형벌권 행사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하므로,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 평균인구수로부터 -56.29%의 인구편차를 보이는 것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관한 헌법상 허용한계를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사 계급까지 재산등록 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령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9.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헌법 제32조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가사사용인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가사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가사사용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지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헌법 제32조는 연소자, 여성근로자, 장애인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0.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관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과의 발생 시기나 종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② 원심재판장이 상고장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거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고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하거나 상고심 재판장이 아닌 원심재판장이 재판을 하게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③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 ④ 피고가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도 30일 이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피고가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지 여부를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조항은 원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⑤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를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양형상의 불이익을 받게 하는 자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11.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16조는 양심의 자유, 제46조제2항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제103조는 법관의 양심에 따른 심판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양심은 인간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으로서 개인의 진지한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의미한다.
- ②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 실현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데 양심의 성질상 내심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제한할 수 없지만, 외부로 표현되었을 때에는 제한이 가능하다.
- ③ 양심실현의 자유에는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뿐 아니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함된다.
- ④ 현역병 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으로 인한 고역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도저히 대체복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⑤ 일반적 위헌 심사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를 공익과 교량하고 양심을 상대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12. 국회의 조직과 구성, 회의운영과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가.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나. 1960년 개정헌법은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였고 양원의 의결이 불일치 할 경우 참의원의 재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다.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을 할 수 없다. 다만, 세입예산안과 관련 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라. 국회는 셋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전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전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전원 위원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50조제1항 단서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적용된다.

- ① 가, 나
- ② 가, 로
- ③ 가, 다, 로
- ④ 나, 다, 라
- ⑤ 나, 라, 로

13. 기본권의 효력과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이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인간의 법률관계도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며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경우라도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 ② 사인간의 계약 내용에 국가가 관여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자제한법」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사적자치권 또는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경감하거나 제거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 ‘극장’부분 중 대학의 정화구역에서도 극장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입법자의 주관적인 동기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가장 큰 주된 기본권은 표현 및 예술의 자유라고 할 것이다.
- ④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더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10조(대습상속분)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민법」 제1118조 부분은 대습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상속에서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을 유류분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14.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ㄱ. 헌법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선거’라고 규정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선임방법’이라 규정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 수 없다.
 - ㄴ. 주민투표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교집단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 헌법상의 평등권 심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ㄷ.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내부적 분쟁도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은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ㅁ.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지방의회는 단지 자율권을 이유로 임의로 그 회의를 방정할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 ① ㄱ, ㄷ
- ② ㄱ, ㄴ
- ③ ㄱ, ㅁ
- ④ ㄴ, ㄷ
- ⑤ ㄴ, ㅁ

15.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인 노역장유치도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②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은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음주운전행위도 가중처벌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④ 헌법 제12조제4항이 규정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보장되는 것으로 보아도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
- ⑤ 구속 피고인의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를 본형형기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16.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으면서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여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병역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만 가산점을 주고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그 이후 국외로 이주한 동포와 구분하여 전자를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동법 조항은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④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조항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人)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⑤ 수영장 등 다른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제도를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는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는 그 밖의 국민과 달리 골프장 부가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1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란 공익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등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므로 최소침해성에 위배된다.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의하여 수형인 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평생토록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수형인 등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의 범죄수사 등에 신원확인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은 중요하고, 그로 인한 수형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혼인 외의 자녀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교부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정보주체들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가장 은밀한 정보가 유출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시행령」이 회비모금의 목적으로 세대의 주소뿐만 아니라 성명까지 적십자사에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 이용자의 선거운동기간 중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18.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직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4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며,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②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③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84조는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헌법은 명문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다른 소추대상자보다 가중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나,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나 재발의의 요건 또는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신임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고와 같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제안의 피력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건에 대한 상고 제기 후 그 소송 계속 중에 다시 같은 조항에 대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된 경우라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 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ㄷ.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요건과 대상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하나의 헌법소원심판으로 양자의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ㄹ.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ㅁ.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등 법률의 하위규범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 ① \neg , \perp , \equiv
 ② \neg , \equiv , \square
 ③ \equiv , \equiv , \square
 ④ \neg , \perp , \equiv , \square
 ⑤ \neg , \perp , \equiv , \equiv , \square

20.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부분은 수수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죄질과 상관없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한다.
- ②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해당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 ③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없다.
- ④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에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의 원칙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1.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것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재산적 기여를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ㄴ.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군인연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ㄷ. 입법자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인 행위제한조항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보상의 근거를 두었더라도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요건까지 구체적으로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너비가 좁은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규정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건축선 후퇴 부분만큼 대지의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게 하면서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ㅁ.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조항은 출판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22.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을 징계·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징계·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②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한 경우 국회의원의 그 조약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된다.
- ③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폐회 중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 국회는 다음 회기에 의결하여야 한다.
- ④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으며, 해당 회기에 의결되지 않은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 ⑤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아니하여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3. 국민과 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구「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가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리성 기준에 따라 입법재량의 자의적 행사로서 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ㄴ.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규정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자신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국적법」 규정으로 인해 해당 외국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ㄹ.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북한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북한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여권을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의 효력은 헌법 제3조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 범위 내에 있는 북한지역에도 미치는 것이다.

ㅁ.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객관적인 국가 구성요소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주권적 기본권인 영토권을 도출할 수 없으며 영토권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새롭게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영토권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ㄹ, ㅁ

24.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좁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ㄴ. 자동차를 이용하여 광고를 할 때,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광고를 금지한 조항의 경우 광고의 매체로 이용될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표현방법에 따른 규제로서, 표현의 방법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비례의 원칙의 준수 하에서 가능하다.

ㄷ.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판단하면 족하다.

ㄹ. 방송사업자의 주관적 권리로서 방송운영의 자유는 이를 허용하는 형성법률에 의해 비로소 그 형성된 기준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규정에 따른 과잉금지 내지 비례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ㄱ	ㄴ	ㄷ	ㄹ
①	O	X	O	X
②	X	O	X	O
③	X	O	O	X
④	X	O	O	O
⑤	X	X	O	X

25.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 ②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에 의하여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무총리가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 외에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 그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④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하여 국가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⑤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경 제 학

1.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Q_D = 18 - 2P$, $Q_S = -6 + 2P$ 로 주어져 있다. 정부는 X재 생산자의 총수입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가격하한제와 생산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하려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P는 가격, Q_D 는 수요량, Q_S 는 공급량이며, 생산자의 총수입액은 판매 수입에 정부보조금 수입을 포함한 총수취액을 의미한다)

- < 보 기 >
- ㄱ.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X재의 균형가격은 6이고 거래량은 6이다.
 - ㄴ. 생산자에게 X재 1단위당 1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 ㄷ. 가격하한을 $P=7$ 로 설정하고 초과공급을 정부가 모두 매입하는 경우, 정부의 총지출액은 28이다.
 - ㄹ. 가격하한을 $P=7$ 로 설정하고 초과공급을 정부가 모두 매입할 때의 생산자의 총수입액은 X재 1단위당 1의 보조금을 지급 받을 때의 총수입액보다 10만큼 크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2. 단기 IS - LM 분석이 적용되는 폐쇄경제에서 투자와 화폐수요는 이자율에 반응하며,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세를 인상할 때, 이로 인한 경기위축효과의 정도가 가장 작은 경우는? (단, 조세 인상은 민간의 기대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① 투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큰 경우
- ②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큰 경우
- ③ 한계소비성향이 큰 경우
- ④ 명목임금이 단기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
- ⑤ 화폐공급이 외생적으로 고정된 경우

3. A 기업의 생산함수는 $Q = \sqrt{LK}$ 로 주어져 있다. 노동(L)의 단위당 가격 $w = 4$, 자본(K)의 단위당 가격 $r = 1$ 이다. A 기업은 주어진 산출량 $Q = 10$ 을 생산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모든 생산요소는 가변요소이다)

- < 보 기 >
- ㄱ. 비용최소화 조건에서 자본에 대한 노동의 한계기술대체율($MRTS_{LK}$)은 4이다.
 - ㄴ. 비용최소화점에서 노동 투입량은 자본 투입량보다 크다.
 - ㄷ. 산출량을 증가시킬 때 비용최소화점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 ㄹ. 임금이 상승하면, 비용최소화를 위해 기업은 노동 대비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생산요소 투입 조합을 조정한다.
 - ㅁ. 이 생산함수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하므로,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은 감소한다.

- ① ㄱ,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ㄷ, ㄹ, ㅁ
- ⑤ ㄱ, ㄷ, ㄹ, ㅁ

4.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이 중앙은행의 정책을 신뢰하여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고정(anchored)되어 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단기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 ② 장기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게 된다.
- ③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 상충관계가 강화된다.
- ④ 자연실업률이 하락한다.
- ⑤ 기대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감소한다.

5.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가.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 양(+)이면, 국내총생산(GDP)은 국민총생산(GNP)보다 크다.
 나.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 양(+)이면, 국내총생산(GDP)은 국내총소득(GDI)보다 작다.
 다.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 양(+)이면, 국내총소득(GDI)은 국민총소득(GNI)보다 작다.
 르. 폐쇄경제하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이 국민총생산(GNP)보다 크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나, 르
- ⑤ 가, 나, 르

6. 두 재화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소비자 A의 앵겔곡선(Engel curv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때, 가로축은 소비량, 세로축은 소득을 나타낸다)

- ① 열등재의 앵겔곡선은 우하향한다.
- ② 앵겔곡선의 기울기는 수요의 소득탄력성 부호에 의해 결정된다.
- ③ 필수재의 앵겔곡선은 사치재의 앵겔곡선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 ④ X재의 앵겔곡선이 우하향하면, Y재의 앵겔곡선은 반드시 우상향한다.
- ⑤ 효용함수가 $U = X^{\alpha}Y^{(1-\alpha)}$ 의 형태를 갖는 경우($0 < \alpha < 1$), X재의 앵겔곡선은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다.

7. 소비자 A는 두 재화 X재와 Y재만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는다고 한다. 소비자 A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X재의 보상수요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X재의 보상수요곡선이 수직이면, X재와 Y재는 서로 완전대체재이다.
- ② X재가 정상재라면 X재의 보통수요곡선보다 X재 보상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욱 가파르다.
- ③ X재에 소득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X재의 보상수요곡선은 X재의 보통수요곡선과 같다.
- ④ X재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자 A의 잉여변화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 ⑤ X재가 기펜재라면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8. A국에는 기업 1과 기업 2만 존재한다. 기업 1은 가죽을 생산하며, 기업 2는 가죽을 사용하여 가죽점퍼를 만든다. 기업 2는 기업 1로부터 가죽 2만원어치를 구매하여 가죽점퍼 1개를 만들어 5만원에 판매한다. 기업 1은 2025년에 가죽 200만원어치를 생산했고, 기업 2는 이 중에 60%인 120만원어치를 구매하여 가죽점퍼 60개를 만들어 그 중 50개를 판매했다. A국의 2025년 GDP로 옳은 것은?

- ① 250만원
- ② 300만원
- ③ 380만원
- ④ 420만원
- ⑤ 500만원

9. 다음은 갑, 을 두 사람이 각각 전략1과 전략2로 경쟁하는 상황에 대한 보수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보수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숫자는 갑의 보수, 두 번째 숫자는 을의 보수를 나타낸다)

구분		을	
		전략1	전략2
갑	전략1	(3, 3)	(5, 6)
	전략2	(5, 7)	(a, b)

- ① 갑이 전략1을 선택하는 경우 을은 전략2를 선택한다.
- ② 만약 $a > 5$ 라면 갑의 강우월전략은 전략2이다.
- ③ 만약 $b > 6$ 이라면 을의 강우월전략은 전략1이다.
- ④ 만약 $a = 3$, $b = 8$ 일 때, 이 게임은 유일한 순수전략 내쉬균형을 갖는다.
- ⑤ 만약 $a = b$ 이고, $a > 7$ 이라면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한다.

10. 폐쇄경제의 IS-LM 모형에서 재화시장균형은 $Y = C(Y - T) + I(r) + G$, 화폐시장균형은 $\frac{M}{P} = L(Y, r)$ 로 주어진다. 현재 A국 경제는 완전고용 수준보다 낮은 산출량에서 균형 상태에 있으며, 중앙은행은 명목화폐공급을 고정하고 있다.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조합 및 경제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Y는 산출량(소득), C는 소비, T는 조세,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M은 명목화폐공급, P는 물가수준, r은 이자율, L(Y, r)은 실질화폐수요이다)

< 보 기 >

ㄱ.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대체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가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보다 크다.
 ㄴ.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을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구축효과는 작아진다.
 ㄷ.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는 작아진다.
 ㄹ. 확장적 재정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도록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줄이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ㅁ. LM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확장적 통화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는 작아진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11. 완전경쟁시장에서 A 기업의 비용함수와 시장 균형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A 기업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단기 총비용함수: $C = 300 + 50Q + 10Q^2$
 시장 균형가격: 130
 (단, Q는 A 기업의 생산량이다)

- ① 이윤을 얻고 있어 생산을 계속한다.
 ② 0의 이윤을 얻고 있지만 생산을 계속한다.
 ③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생산을 중단한다.
 ④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생산을 계속한다.
 ⑤ 생산을 계속하거나 중단하거나 이윤은 동일하다.

12. 솔로우(R. Solow) 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가 $y = k^{0.5}$ 로 주어진다. 저축률 $s = 0.25$, 인구성장률 $n = 0.02$, 감가상각률 $\delta = 0.08$ 이며, 기술진보는 없다. 정상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k^*)과 1인당 산출량(y^*)으로 옳은 것은?

	k^*	y^*
①	4	2
②	6.25	2.5
③	9	3
④	12.25	3.5
⑤	16	4

13.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은 생산공장 A, B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두 공장의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으며, 이 기업의 총 로봇 생산량(Q)은 $Q = Q_A + Q_B$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_A , Q_B 는 각각 공장 A의 로봇 생산량, 공장 B의 로봇 생산량이다)

공장 A의 비용함수: $C_A(Q_A) = 2Q_A + F \quad (Q_A > 0)$
 $C_A(Q_A) = 0 \quad (Q_A = 0)$
 공장 B의 비용함수: $C_B(Q_B) = Q_B^2$

- ① $Q_A > 0$ 일 때, 공장 A의 한계비용은 공장 A의 로봇 생산량이 증가해도 일정하다.
 ② 공장 B의 한계비용은 공장 B의 로봇 생산량(Q_B)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③ $F=1$ 인 경우, 이 기업에서 로봇 3대를 생산하려면 공장 A에서 2대, 공장 B에서 1대를 생산하는 것이 비용극소화 측면에서 유리하다.
 ④ $F=10$ 인 경우, 이 기업에서 로봇 3대를 생산하려면 공장 A에서 0대, 공장 B에서 3대를 생산하는 것이 비용극소화 측면에서 유리하다.
 ⑤ 비용극소화를 추구하는 이 기업이 로봇 3대를 생산한다고 할 때, 공장 A와 공장 B 모두에서 로봇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F > 4$ 이어야 한다.

14. 고용통계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가. 고용률이 일정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경우, 실업률은 하락할 수 있다.
 나. 구직 단념자가 많아지면, 고용률은 증가할 수 있다.
 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고 고용률이 변하지 않는 경우, 실업률은 상승할 수 있다.
 라.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상승하더라도 실업률은 상승할 수 있다.
 마.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실업은 자연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라
- ③ 나, 라, 마
- ④ 가, 다, 라, 마
- ⑤ 나, 다, 라, 마

15.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막으려는 물가연동제(index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질임금의 경직성이 경제 전체의 신축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②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실현하는 예측(self-fulfilling prophecy)’을 하게 하여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위험성이 있다.
- ③ 다양한 물가지수 중 어떤 지수에 연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 ④ 물가상승에 대한 예방적 조치보다는 사후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 ⑤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실질임금의 조정을 통해 원래의 균형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

16.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U = \sqrt{LF}$ 로 주어져 있고, 시간당 임금 이 15이며 총가용시간은 24이다. 소비자 A는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으며, 소득은 모두 식품(F)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소비자 A가 예산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때, 여가시간과 구매하는 식품의 양으로 옳은 것은? (단, L은 여가시간이며 식품(F)의 가격은 2.5이다)

	L	F
①	12	60
②	12	72
③	14	76
④	14	84
⑤	16	90

17. 쿠르노(Cournot) 과점모형과 베르뜨랑(Bertrand) 과점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기업들의 비용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보 기 >

가. 쿠르노 과점모형에서는 각 기업이 상대 기업의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한다.
 나. 쿠르노 과점모형에서는 베르뜨랑 과점모형보다 균형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다. 베르뜨랑 과점모형에서는 가격 경쟁의 결과로 가격이 한계 비용 수준으로 수렴한다.

- ① 가
- ② 가, 나
- ③ 가, 다
- ④ 나, 다
- ⑤ 가, 나, 다

18. A국은 비만치료제를 자국 내 생산과 해외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비만치료제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각각 $P = 80 - \frac{1}{2}Q$, $P = 5 + Q$ 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만치료제의 국내 거래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인 $P = 20$ 이라고 한다. 최근 A국은 외교 및 정책적 이유로 수입하는 비만치료제 1단위당 관세 10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관세정책으로 인한 정부의 관세수입(tariff revenue)을 ㉠라 하고, 관세정책이 발생시키는 초과부담(excess burden of tariff)을 ㉡라 할 때, ㉠:㉡의 비율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 ① 2.5:1
- ② 5:1
- ③ 7.5:1
- ④ 10:1
- ⑤ 15:1

19. A국에서 대외 금융여건의 변화로 자국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A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단기에는 가격 경직성이 존재하고, 자본이동은 단기적으로 불완전하다. 또한 명목환율은 외국통화 1단위에 대한 자국통화의 교환비율이다)

- < 보 기 >
- ㄱ.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은 J-커브 효과를 통해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수출·수입 물량 조정의 시차 때문일 수 있다.
 - ㄴ.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환율 상승은 곧바로 국내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단기에도 실질환율은 변하지 않는다.
 - ㄷ. 변동환율제하에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시행될 경우 자본유입과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을 통해 순수출이 감소된다.
 - ㄹ.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물가를 자극할 경우, 물가안정목표를 추구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20. 갑국에서 소비자는 두 재화 A재와 B재만을 소비한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측정하기 위한 재화묶음은 A 10단위, B 10단위이며, 기준연도의 CPI는 100이다. 국내에서는 소비재만 생산되며, 이는 모두 국내에서 소비된다. 다음 표는 두 연도의 가격과 소비 행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비교연도에 명목이자율은 8%이며, 해당연도의 인플레이션율은 CPI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구분	A재 가격	B재 가격	실제 소비량
기준연도	10	10	A: 10 B: 10
비교연도	20	10	A: 5 B: 15

- < 보 기 >
- ㄱ. 비교연도의 CPI는 150이다.
 - ㄴ. CPI로 측정한 물가상승률은 실제 생활비 상승률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 ㄷ. 비교연도의 실질이자율은 0%이다.
 - ㄹ. 재화 A와 B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된 소비재라면, 비교연도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CPI 상승률과 동일하다.
 - ㅁ. 재화 A가 외국에서 생산된 소비재라면, 비교연도에 CPI는 상승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ㅁ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21. 명목환율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환율의 상승폭이 제한적인 상황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명목환율은 외국 통화 1단위에 대한 자국통화의 교환비율이다)

- ① 통화정책 변화로 명목환율 변동이 실물경제에 즉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②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 증가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 ③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감소하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 ④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되면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⑤ 국내 물가상승률이 해외 물가상승률을 상회하였기 때문이다.

22. A국의 단기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은 $\pi = \pi^e - a(u - u^e)$ 이며, A국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π 는 실제 인플레이션율, π^e 는 기대인플레이션율, u 는 실업률, u^e 는 자연실업률이며, 계수 $a > 0$ 이다)

- < 상 황 >
- 현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 자연실업률은 6%이다.
 -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을 1%로 낮추겠다고 공표하였다.
 - 유가 급등이라는 부정적 공급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 경제주체들은 중앙은행의 정책이 부분적으로만 신뢰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 < 보 기 >
- ㄱ. 부정적 공급충격은 단기 필립스곡선을 상방으로 이동시킨다.
 - ㄴ. 중앙은행의 정책이 완전히 신뢰 가능하다면,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과정에서 실업률 상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ㄷ.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면,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을 초과할 수 있다.
 - ㄹ. A국의 디스인플레이션 희생비율(sacrifice ratio)은 공급충격이 없는 경우에 비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 ㅁ.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1%로 안정되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보다 낮게 유지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ㄷ, ㄹ, ㅁ

23. A국, B국의 각 재화 단위당 노동투입량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과 B국, X재와 Y재로 구성된 리카도 모형을 가정하며, 교역의 거래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 A국과 B국의 각 재화 단위당 노동투입량

구분	A국	B국
X재	8	4
Y재	6	2

- ① A국은 모든 재화에 대해 B국보다 절대우위에 있다.
- ② 교역조건이 X재 1개당 Y재 1.5개일 때, A국은 교역의 이득이 있다.
- ③ A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 ④ B국의 Y재 1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X재 2개이다.
- ⑤ Y재 1개의 교역조건은 X재 $\frac{1}{2}$ 개에서 2개 사이이다.

24. A국은 완전한 자본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단기에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때, 새로운 단기균형에서 환율과 산출량의 변화로 옳은 것은?

	환율	산출량
①	절하	감소
②	절하	증가
③	절상	감소
④	절상	증가
⑤	변화 없음	증가

25. 갑국과 을국은 동일한 생산함수 $Y = AF(L, K, H, N)$ 를 가지며, 두 나라의 기술수준(A)과 자연자원(N) 및 인구증가율은 동일하다. 현재 갑국은 을국에 비해 자본량(K)과 인적자본(H)이 모두 더 많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L은 노동량이고, 저축률은 일정하다)

- < 보 기 >
- ㄱ. 현재 갑국의 1인당 소득은 을국보다 높다.
 - ㄴ.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이 존재한다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을국의 경제성장률은 갑국보다 높을 수 있다.
 - ㄷ. 저축률·인적자본 수준이 국가 간 서로 달라도 장기적으로 두 나라의 1인당 소득수준은 같아진다.
 - ㄹ. 두 나라의 저축률이 동일하다면, 인구증가율 차이는 장기 1인당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없다.
 - ㅁ.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만 1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장기 경제성장률은 변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ㅁ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 정 법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 「공무원연금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급여환수처분은 기속행위이고, 행정청이 환수 여부 또는 범위를 선택할 재량을 가지지 못한다.

ㄴ. 관계행정청이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은 부과 여부에 관한 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ㄷ.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ㄹ.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동 조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ㅁ.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행위이다.

	ㄱ	ㄴ	ㄷ	ㄹ	ㅁ
①	O	O	O	X	O
②	O	O	X	O	X
③	O	X	O	X	O
④	X	O	O	X	O
⑤	X	X	O	O	X

2.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② 법관의 재판에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였거나 직무수행상 준수가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불복절차나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접견 불허결정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 ⑤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탈소등록 당시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직무상 위반 행위와 저당권자가 입은 저당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행하는 공고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ㄷ.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과거에 상대방이 동일한 내용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우편으로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폐기물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달받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폐기물 조치명령은 효력이 발생한다.

ㄹ. 행정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ㅁ.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정되어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서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ㄷ, ㅁ
- ⑤ ㄷ, ㄹ, ㅁ

4.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보기>에서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읍·면장에 의한 이장의 면직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하여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경우

○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수령한 자가 그 협약 상대방을 상대로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관할행정청과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X국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기간: 2024. 1. 1.부터 2025. 12. 31.까지),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乙에게 위 가설건축물을 임대하였다(임대기간: 2024. 7. 1.부터 2026. 6. 30.까지). 甲은 위 대부계약 종료 후 X국유지에 관하여 관할행정청과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乙은 2026. 3. 1. 현재까지 위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

- ① 관할행정청은 甲에게 2026. 1. 1.부터 2026. 3. 1.까지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일반재산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하는 관할행정청의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대한민국은 甲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甲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 ⑤ 관할행정청은 乙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6. 공무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법」상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목적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저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 ②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견책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처분권자는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징계부가금처분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나, 징계부가금처분과 내용상 관련된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거친 경우 징계부가금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별도로 소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⑤ 감사원은 조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7.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ㄴ. 법률이 행정행위에 부여하는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내용의 부관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다.

ㄷ.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한 이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ㄹ. 행정청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인가하면서 기부채납 부관을 부가한 경우 그 상대방은 기부채납 부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ㅁ.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어업면허처분 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ㄱ	ㄴ	ㄷ	ㄹ	ㅁ
①	X	X	X	O	X
②	O	X	O	X	X
③	O	O	O	O	X
④	O	O	X	X	O
⑤	O	O	X	O	O

8.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ㄴ. 항고소송에 있어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하면,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에 의해 행정청은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ㄹ.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소송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가를 받은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乙은 丙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면서 관할 관청 A에게 위조한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A로부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이하 ‘인가’라고 함)를 받았다. 그리고 甲은 乙로부터 위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A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 ① A가 甲에게 인가를 하는 경우, 乙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甲에게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 ② A가 甲에게 인가를 한 후, A는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乙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甲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A가 甲에 대한 인가를 직권취소한 경우, 인가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은 인가취소 그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④ A가 甲에게 인가를 하면서 乙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
- ⑤ 乙이 받은 인가는 乙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취소 가능성을 乙은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A가 직권취소를 한 경우 A가 乙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는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10.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확약이란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②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③ 「수산업법」상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행정청은 확약 후에 확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11.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가.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직접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나. 「행정심판법」이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거부처분 취소재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르.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나, 르
- ⑤ 다, 르

12.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 물품구매계약 등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 원칙이나 계약자유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법에서 정한 입주계약 해지의 절차, 그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입주계약 해지통보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공법상 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위 규정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의 시행령에서 사립대학교를 공공기관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은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 등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 ②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반드시 ‘법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보공개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③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밖에 추가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해당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보호기간 동안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⑤ 공공기관이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정보공개청구자에게 있으나,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 乙로부터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양수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甲은 동법에 따라 乙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 ① 甲이 영업양수 대상에 불법증차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甲은 불법증차 차량이라는 물적 자산과 그에 대한 운송사업자로서의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② 「화물자동차법」에서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므로,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란 운송사업 허가에 기인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한다.
- ③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때에는 양도인의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이에 따라 양도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위법상태의 승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④ 관할행정청은 甲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甲에 대하여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때 甲의 책임 범위는 지위승계 후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되지 않고, 공법상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위승계 전에 발생한 乙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 ⑤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은 ‘운송사업자등’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분사유로 하는 ‘대인적 처분’으로서,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 차량이라는 물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운송사업 허가취소 등의 ‘대물적 제재처분’과는 구별된다.

15.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다.
- ②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이 헌법, 법률, 그 하위의 법규명령, 법의 일반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주민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③ 취소소송과 해당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며, 재결의 내용상 위법도 이에 포함된다.

16.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입법자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ㄴ. 법률의 조례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ㄷ.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 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피조사기관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면 그러한 행정사무조사는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서 주민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④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⑤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은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18. 법무부장관이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가.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甲이 다른 경로를 통해 입국금지결정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입국금지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라. 甲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입국금지처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① 가, 나, 다
- ② 가, 나, 라
- ③ 가, 다, 라
- ④ 나, 다, 라
- ⑤ 가, 나, 다, 라

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애인 甲은 정부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해야 할 소규모 소매점 범위를 장기간 지나치게 좁게 유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① 기본권으로서 甲의 접근권이 접근에 대한 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소극적·방어적인 수준을 넘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 ② 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 ③ 행정청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그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행정입법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장애인의 접근권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작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과실이 인정된다.
- ⑤ 「국가배상법」 제3조가 생명, 신체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이는 생명, 신체 외의 다른 권리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토지보상법」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 ②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 ③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④ 손실보상금 채권(청구권)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 ⑤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정착한 이전대상 건축물 등을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제5항 등에 따라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전수용이 발생한다.

21. 행정의 재량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건축허가신청이 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바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③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절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④ 기속재량행위의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목적성 내지 공익성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2.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임기관은 자기의 이름과 책임 아래 그 권한을 행사한다.
- ②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처분은 위법무효의 처분이다.
- ③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또는 제4조는 위임 또는 재위임의 일반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 ④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⑤ 법령상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함에도 조례로 한 위법한 위임에 따라 행해진 수임기관의 처분은 위법무효의 처분이다.

23. 甲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 甲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1억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수소법원은 인용판결을 할 수 없다.

ㄴ. 甲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수소법원은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ㄷ. 甲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1억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수소법원은 인용판결을 할 수 있다.

ㄹ. 甲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수소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분리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ㅁ. 甲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등 확인소송만을 제기하였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

	ㄱ	ㄴ	ㄷ	ㄹ	ㅁ
①	O	X	O	X	X
②	O	O	O	X	X
③	O	X	O	X	O
④	O	O	X	O	X
⑤	X	O	X	O	O

2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심판법」상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 ⑤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으며,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5.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가.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

다.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해당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행정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라. 형량하자의 법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가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가, 나, 다
- ⑤ 나, 다, 라

행 정 학

1. 다음 이론과 그 핵심적 특징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뉴거버넌스론 - 투명성, 효율성
- ② 생태론 - 형식주의, 항상성
- ③ 신공공서비스론 - 시민정신, 고객만족
- ④ 넛지이론 - 자율성, 참여
- ⑤ 신행정론 - 탈관료화, 처방성

2. 충청북도가 부과·징수할 수 있는 보통세의 세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등록면허세, 재산세
- ②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③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 ④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⑤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3. 조직 구조의 설계 원리 중 통솔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솔 범위가 넓어지면 중간 계층이 줄어들어 평면 구조를 형성하며 의사소통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 ② 부하의 역량이 뛰어나고 업무가 일상적일수록 통솔 범위는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 ③ 한 사람의 상관이 통솔하는 부하의 수가 많아질수록 조직은 고층 구조가 된다.
- ④ 현대 조직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솔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계층을 늘리는 추세다.
- ⑤ 통솔 범위의 결정은 물리적 거리나 업무의 성격과는 무관하며 오로지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에만 의존한다.

4. 「국가재정법」상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 한 번 법령으로 정해지면 매년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속되는 조세지출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ㄴ. 조세지출예산은 직접적인 보조금 지출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므로 국회의 실질적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ㄷ. 비과세, 감면 등 세제 혜택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ㄹ. 조세지출은 세출예산과 달리 법률에 의해 집행되므로 특정 분야에 대한 특혜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ㅁ. 정부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X	O	O	X	O
②	X	O	X	O	X
③	X	X	O	O	X
④	O	O	O	X	O
⑤	O	X	O	X	O

5.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실험적 방법은 외적 타당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 ② 역사요인(사건효과)은 실험적 방법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 ③ 정책집행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실험적 방법은 외적 타당성이 높다.
- ④ 준실험적 방법보다 진실험적 방법에서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⑤ 비실험적 방법의 하나인 사후적 비교집단 구성 설계는 선정효과로 인하여 내적 타당성이 낮다.

6.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직위는 공무원 한 사람에게 부여된 직무와 책임이다.
 - 등급은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단이다.
 - 직군은 직렬을 보다 세분화한 것이다.
 -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난이도와 책임도의 정도가 서로 다른 모든 직무들의 단위이다.
 - 직류는 유사한 성격의 직렬들을 모은 직위 분류의 대단위이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7.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ㄱ. 주민발의제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주민감사청구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써,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 ㄷ. 주민투표제 -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기능을 부여한 제도로써,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 ㄹ. 주민소송제 -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감사 청구를 먼저 한 다음 감사 청구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ㅁ. 주민참여예산제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써, 실제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ㄴ, ㄷ, ㄹ, ㅁ

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지표 중 재정자주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주재원주의는 재정자립도보다 재정자주도의 제고를 지지한다.
- ② 자체 수입에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을 합한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실질적인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측정한다.
- ③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 ④ 분모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외하여 지표를 산출하므로 재정자립도보다 수치가 항상 높게 나온다.
- ⑤ 정부는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9. 예산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니스카넨(Niskanen)은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예산극대화를 설명하였는데, 관료는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 등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에서 정치가는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최적 생산량을 넘어서는 평균비용과 평균편익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여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 ③ 바그너(Wagner)는 정부 규모가 공공재 등 공공서비스의 소득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는 이상으로 팽창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국가활동 증대의 법칙이라고 하였다.
- ④ 보몰(Baumol)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정부 부문의 비용이 생산성이 급격히 오른 제조업과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팽창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 ⑤ 피코크(Peacock)와 와이즈먼(Wiseman)은 사회혼란기에 국민이 공공지출의 확대를 이해하여 공공지출이 늘어났지만,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은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아서 공공지출은 늘어나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는다고 예산팽창을 설명하였다.

10.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구성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국무총리 소속으로 ‘처(處)’ 단위의 기관이 존재한다.
- ③ 대통령은 직권으로 새로운 ‘부(部)’ 단위의 기관을 신설할 수 있다.
- ④ 부·처·청 이외의 행정기관으로서의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참모기관이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된다.

11.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의 정책 유형 중 경쟁적 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는 대가로 소수 기업의 자율적 지대추구 행위를 방임하는 정책이다.
- ② 항공 노선권 허가와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③ 최저임금제나 「식품위생법」과 같이 일반 대중의 안전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 ④ 비용은 다수가 부담하고 편익은 소수의 기업가들에게 집중되는 정치적 상황을 초래한다.
- ⑤ 희소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다수의 경쟁자 중 특정 주체에게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 공익적 규제를 가한다.

12. 우리나라 공무원의 신분변경과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위해제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 ② 소청심사제도의 대상으로는 신분상의 모든 불이익 처분이나 부작위가 해당되지만, 승진탈락 및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대상이 아니다.
- ③ 고충심사의 대상으로는 근무환경, 후생복지, 인사관리, 신상문제 등이 해당되지만, 보수와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 ④ 공무원의 강제퇴직에는 당연퇴직, 의원면직, 징계면직이 포함된다.
- 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고, 연금급여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13.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의 이용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사고이월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 ③ 계속비의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총액계상사업의 총규모는 예산순계 기준으로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14. 정책결정모형 중 회사모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지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 ② 갈등은 불완전한 해결 상태에 머물게 된다.
- ③ 단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안을 선택한다.
- ④ 참여자들은 정책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한다.
- ⑤ 환경을 유동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신고 및 제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 ②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신고
- ③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16.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 의하면,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자율성이 거의 없고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 ② 프레스만(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는 연방정부의 오클랜드 실업자 구제정책 집행과정 분석을 통해 참여기관 및 참여자 수가 너무 적었다는 점을 정책집행 실패요인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 ③ 엘모어(Elmore)가 설명한 후방향적 접근(backward mapping)은 하향식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 ④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가 분류한 관료적 기업가형의 정책집행자는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⑤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 확보 방법으로서 유인(incentives)은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정책담당자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17.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예산의 경우 지출기간의 제한이 없다.
- ② 준예산과 잠정예산은 가예산과 달리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③ 미국, 영국, 캐나다는 잠정예산을 채택하였다.
- ④ 한국, 일본은 준예산을 채택하였다.
- ⑤ 한국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준예산이 편성된다.

18.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훈련된 무능’은 권위적이고 문서기반적인 의사결정에서 나오는 조직문화이다.
 - ② 레드 테이프(red tape) 현상은 관료제의 복잡성과 일 처리 지연의 형태로 나타난다.
 - ③ 목표대치는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원래 목표보다 조직의 수단인 절차 준수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 ④ 규정 위주의 통제체제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저해하는 경직성을 초래한다.
 - ⑤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직무수행에 있어 옳고 그름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

19.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결합된 이론이다.
 - ②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 ③ 공급자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 ④ 행정의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확대를 추구한다.
 - ⑤ 정부의 역할이 축소된 ‘작은 정부’를 강조한다.

20. 우리나라 공직의 분류와 그 예시의 연결이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가. 일반직 - 법관
 나. 정무직 - 감사원 감사위원
 다. 별정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라. 정무직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마. 별정직 - 국회 수석전문위원
 바. 정무직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사. 특정직 - 국가안보실장

- ① 가, 다
- ② 나, 바
- ③ 나, 마, 바
- ④ 다, 라, 마
- ⑤ 마, 바, 사

21. 공공가치창출론과 공공가치실패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공가치실패론은 무어(Moore)가 주장한 것이다.
 - ② 공공가치창출론은 공공부문의 행위자가 공공가치에 부합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공공가치실패론은 전략적 삼각형 개념을 제안한다.
 - ④ 전략적 삼각형 개념 중 하나인 공적 가치의 형성은 시민의 지지 및 정당성, 선출직 대표에 대한 책무성, 미디어 평판 등을 중요한 요소로 한다.
 - ⑤ 보즈먼(Bozeman)은 공공가치의 핵심가치들로 인간의 존엄성, 시민참여, 지속가능성, 개방성과 기밀성, 타협 등을 제시하였다.

22.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조직목표변동의 유형은?

미국에서 소아마비퇴치를 목표로 내세웠던 소아마비재단은 예방접종의 개발로 목표가 달성되었으나 기관의 존속을 위해 관절염과 장애아 출생의 예방 및 치료라는 새로운 목표를 채택하였다.

- ① 목표의 추가
- ② 목표의 승계
- ③ 목표의 확대
- ④ 목표의 대치
- ⑤ 목표 간의 비중변동

23. 성장기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장기구론의 핵심은 지역사회 문제를 자체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지방정부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주요 주체들과 일종의 연합을 형성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 ② 성장기구론은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토지자산가와 개발업자가 주도한다는 이론이다.
 - ③ 성장기구론은 엘리트이론과 마찬가지로 도시 체제에 있어서 기업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 ④ 1970년대 중반 몰로치(Molotch)에 의해 제기된 성장기구론은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다른 배경과 동인(動因)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 ⑤ 성장기구론은 도시개발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의 권력 문제를 다루고 있다.

24.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상태표는 수익, 비용,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 ② 중앙정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된다.
- ③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된다.
- ④ 재정운영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된다.
- ⑤ 복식부기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일치시켜 자기검증 기능을 갖는다.

2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대상기관에 서울교통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특정평가는 각 부처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율적 평가 역량 강화 제도이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